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6년 3월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16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신규 선정,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기존 8개 우수사업단과 함께 총 24개 사업단 운영 -
- 청년사업단에 운영 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

■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 선정결과가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사업단 공모절차를 거쳐 3월 3일(화), 16개의 신규 청년사업단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6개 청년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8개의 우수사업단과 함께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년이 해당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연관 분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은 19~34세이나, 지역 여건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

■ 청년사업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는 2026년 신규 청년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제공서비스의 내용, 수행능력 전반을 평가하여 12개 시·도의 16개 사업단을 새로 선정하였다.
- 청년사업단은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정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초등돌봄 서비스(학습지원, 예술창의지원), 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사업단 운영을 위한 운영 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 2026년은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활력 워크숍 외에도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3월 중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 후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사업단 참여를 원하는 청년 제공인력은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 계획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

* 정확한 제공 시기는 사업단별로 다소 상이
** 해당 시·도 홈페이지, 고용24(www.work24.go.kr), 온통청년(youthcenter.go.kr) 전국청년플랫폼) 해당 시·도 온통청년홈페이지
- 유주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국민께 더 좋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최근 인구·산업·사회구조 급변으로 청년의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사업단 모형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개요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24개소 : 신규 16개소, ☆우수사업단 8개소]

참여 분야(개소)	시도 및 기관명	
신체 건강(16)	(부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대구) ☆헬스케어 휘트니스센터	(대전) 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한양대학교 ERICA산학협력단	(충남)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전남) 목포과학대학 산학협력단
	(전남)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 ☆경북대학교 운동재활연구소	(경남)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등 돌봄(8)	(부산) ☆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종) ☆(주)HA연구원	(대전) 건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 우송정보대학교 평생교육원	(충북) 청주대학교 석우재활서비스센터
	(전북) 기쁨누리사회적협동조합	(경남)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873. 사회서비스사업과. 2026. 3. 4.

II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30종을 우선 연계,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앞두고 추진 로드맵 발표 -
- 서비스 대상자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단계적 확대 -
-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체계 구축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5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하였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입기('26-'27)-안정기('28-'29)-고도화기('30-) 3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대상자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비전	살던 곳에서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입원·입소는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안정-고도화 3단계 추진으로 제도 정착률 도모 ◆ 필요도가 높은 대상부터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선 연계하고, 신규서비스 개발·확대

	[1단계] 도입기 ('26~'27)	[2단계] 안정기 ('28~'29)	[3단계] 고도화기 ('30~)
세부목표	통합돌봄 틀을 마련, 서비스 연계 시작	대상자·서비스는 늘리고, 지역 간 격차는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더 개선된 서비스 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자로 확대 • 의료필요도 높은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으로 확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서비스 맞춤형 연계 • 신규 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성과분석 및 평가 • 신규서비스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쇠예방부터 임종까지 연속 지원체계 완성
제도기반	운영기반 구축	법·제도 정비	운영체계 혁신

② 서비스

■ 1단계에는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첫째,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둘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또한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넷째,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

■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시범사업(1단계)을 토대로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 3단계에서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도 지속 확충하여 다양성도 확보한다. 이에 따라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30종이 확대되어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노인 (2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진료·왕진버스^{농림부}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치매발견·기본관리 치매전문관리 만성질환관리 통합재택간호 임종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방문건강관리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노인운동프로그램 복약지도 보건소노쇠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시설보호 장기요양 재택의료 통합재가 방문영양 방문재활 병원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돌봄지원사업 독거노인응급안전 중간집^{국토부·합법} 등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노인맞춤돌봄 스마트홈 돌봄
장애인 (21개) 65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 치과) 장애 친화 산부인과 장애 특화 구강진료 장애인 공공재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문체부} 장애인체력인증센터^{문체부}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거지원, 주거환경개선 가사간병 방문지원 이동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장애인 보육·교육 언어발달지원·수어통역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정신 질환자 (1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관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트라우마센터 사례관리 심리상담버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재활시설 주거지원 서비스 동료지원서비스 동료지원쉼터

* 통합돌봄 1단계에서는 검은색 서비스(30개) 중심 제공, 파란색 서비스(30개)는 추후 확충 또는 도입 필요

③ 제도기반

- 1단계에는 통합돌봄 운영기반을 확충한다. 첫째, 중앙정부 추진체계,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본 계획(중앙)과 지역계획(지방)을 연계하여 수립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둘째, 전문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를 등 평가지표를 통해 성과에 연동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돌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 2단계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다직역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도 개선한다.

- 첫째,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이전에는 대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한 번에 조사하여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하여 연계한다. 과거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개별적으로 신청했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시군구가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들이 연계·제공된다. 2단계에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 3단계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누어진 돌봄 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중앙 및 지자체 돌봄사업을 정비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교화한다.
-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대상자는 살던 곳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평가지표를 활용한 성과 기반 예산체계 도입하여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체계 구축하고, 사회적 입원·입소를 줄이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전망이다.
- 정부는 차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자체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877. 통합돌봄정책과. 2026. 3. 5.

III

보건복지 정책 문서, AI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한다

-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조건 완화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건복지부(관계 공공기관 포함)가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유형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종전 - 4유형)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명시
(개선 - 1유형) 변경가능, 상업적 이용가능, 출처명시

- 대규모 언어 모델(LLM*) 등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공공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간행한 규정집 등의 공식 문서는 AI 학습에 가치가 높은 데이터로 평가된다. 특히 의료 분야 AI 개발기업들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을 학습하고 지식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 이해와 생성 작업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AI 모델

- 그러나 종전의 공공누리 유형 중 4유형은 인용만 가능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AI 학습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 사용허가에 따른 AI학습 개편 사례 〉

제약사항	종전 (금지)	개편안 (허용)
“변경금지” 조항	◇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음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설명에 대해 직접 정보를 판단, 해석, 설명, 적용 가능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문의주신 사항은 허용되며...”
“상업적 이용금지” 조항	◇ 기업이 개발하는 AI는 학습 불가 ◇ 대학·공공기관 등 비영리목적의 AI만 학습 가능	◇ 기업이 개발하는 AI도 자유롭게 규정을 학습할 수 있음

■ 복지부는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한편, 시가 규정의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하도록 1유형으로 전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또한 확보한다.

* 저작물의 내용이나 유형에 따라 출처명시 의무까지도 면제되는 0유형도 채택 가능

〈 공공누리 이용조건 유형 구분 〉

적용범위	모든 이용목적에 적용				
-------------	--------------------	--	--	--	--

이용조건	0유형 (‘26.1 신설)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출처명시 의무	-	√	√	√	√
상업적 이용금지	-	-	√	-	√
변경금지	-	-	-	√	√

■ 이에, 보건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재공고하며(‘26.3.12),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 및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저작물이 S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 박정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S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S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공누리 관련 세부사항은 공공누리 누리집(<https://gongu.copyright.or.kr>) 참고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893.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2026. 3. 11.

IV

자살시도자 골든타임 지키기 위해 응급실 현장 목소리 듣는다

- 정신건강정책관, 보라매병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운영 현장 방문 -

-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찾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현장 운영 실태와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참석자)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송경준 보라매병원 부원장 등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 시도 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위기개입부터 지역사회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사업 참여 병원에서는 응급치료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초기상담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병원에서 단기 사례관리(4회)를 거쳐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계한다.

- 현재 전국 93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22,837명의 자살시도자가 사업 참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복지부는 올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98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실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례관리자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등 자살예방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 사후관리를 받은 자살시도자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4.6%)이 그렇지 않은 경우(12.5%)에 비해 1/3로 감소(자살시도자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 연구, '19)

- 보라매병원은 2013년 사업 시행 초기부터 참여해 온 기관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사례관리자 3인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 센터는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기개입과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관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가 확인된 핵심 안전망이다”라며, “현장에서 직접 들은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여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자살시도자가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912. 자살예방정책과. 2026. 3. 17.